

## 한탄강댐이 착공되기까지

갈등과 이해를 넘어 아름다운 결실로



이완호  
K-water 전문위원

### 1. 들어가며

먼저 ‘한국대담회 40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대담회의 역사가 녹아 있는 소중한 기록에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집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댐 분야의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을 생각하여 몇 차례 고사하였으나 발간소위원회 위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의 취지를 공감하고 부끄럽지만 원고의뢰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집필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99년말 설계 때부터 착공 시까지 약 7년여의 찬반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거치면서 '07년초 마침내 첫 삽을 뜬 한탄강댐건설사업을 일선에서 담당했던 경력(담당부장, 처장, 현장단장, 갈등조정위원회 정부측 대표 등)이 고려되었다고 사료된다.

참고로 한탄강댐은 국내 최초의 홍수조절전용댐

이자 RCD댐(롤러다짐 콘크리트댐)으로서 '14년 준공을 목표로 '12. 9월 현재 계획(공정 60%)대로 시공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초석이 된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6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큰 저항 없이 오히려 관련지역의 환영을 받아가면서 순조롭게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댐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많은 반대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댐사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은 영월댐(일명 동강댐)사업의 백지화 선언('00.6)이었다. 본 사건은 정부수립 이후 국책사업이 시행 도중에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초유의 사례로서, 이에 크게 고무된 댐반단체들은 한탄강댐사업을 비롯한 향후의 모든 국책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최악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출발한 한탄강댐은 조사설계, 기본계획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여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의 조정적 중재 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갈등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었고, 실패하자 다시 총리실 산하 임진강수해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가 구성

되어 중립적 전문가의 객관적 검증 결과, 마침내 ‘홍수조절용댐 및 천변저류지’ 라는 최종대안을 결정함으로써 그 지루했던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착공식을 갖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환경파괴라는 가치의 충돌속에서 심한 갈등과 이해를 넘어 어렵게 성사된 한탄강댐건설사업의 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문제와 다양한 해결노력의 과정에서 남겨진 뒷얘기들을 묶어 정리해 봄으로서, 하나의 치수용댐 사업이 착수되기까지 겪었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향후 대한민국 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고자 하였다.

### 2. 한탄강댐 사업의 추진경위

임진강 유역은 홍수피해 다발지역으로, '96, '98, '99년 연이은 대홍수가 발생하여 약 1조원의 재산피해와 1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99. 12. 28일 국무회의에서 임진강 유역에 대한 근원적인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 다목적댐건설사업의 추진을 의결하였다.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는 한탄강댐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최종협의를 '03. 7. 28일자로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끊임없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대립이 심화되었다. 결국 댐 상류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댐건설반대측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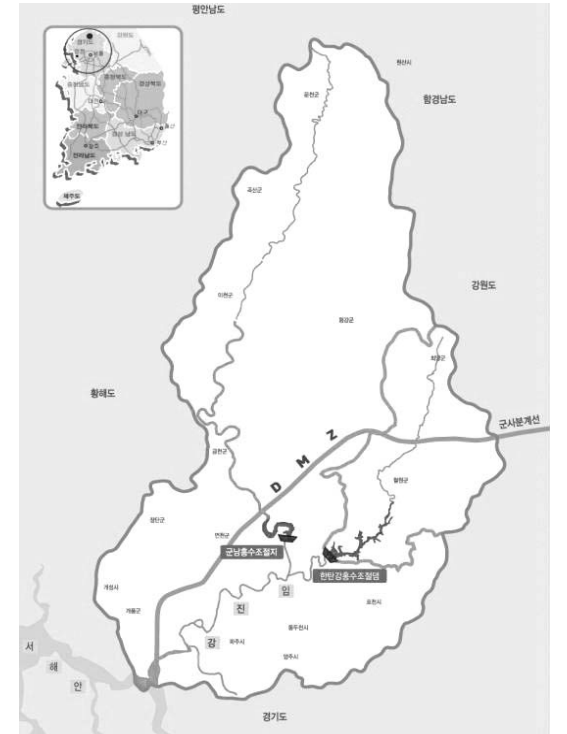


그림 1. 한탄강댐 위치도

이에 대통령 지시로('03. 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하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이 추진('04.2~11)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저류지 2개소 및 홍수조절용댐’ 건설안이 결정되었으나, 반대측주민들의 수용거부로 무산되면서 관련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05. 5. 23)되었다.

이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산하에 검증평가 실무위원회가 설치('05. 8)되었다. 특위에서 약 1년간의 객관적 검증을 거쳐 임진강 유역의 최종 홍수대책으로 ‘홍수조절용댐 및 천변저류지 건설안’ 이 결정('06. 8. 22)되었다.

이어 기본계획고시('06. 12)와 실시계획고시를 거쳐 한탄강댐건설사업이 착수('07. 2)되었다.

(표1. 참고)

### 3. 갈등의 전개와 결말

정부가 '99. 12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수해방지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한탄강다목적댐 계획을 발표('00. 7) 하자 지역주민

표 1. 한탄강댐 추진경위(요약)

• 1995.6~1997.12	임진강 유역조사 (건교부)
• 1997.12	임진강수계 종합치수대책 수립
• 1998.12~1999.12	수도권지역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 (건교부)
• 1999.12.18	<b>수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대통령 비서실)</b>
• 1999.12~2000.12	한탄강댐 기본설계 (건교부)
• 2001.1~2003.8	한탄강댐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협의
• 2001.7~2003.7	<b>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b>
• 2003.12.19	<b>대통령 강원도 방문시 댐건설계획안 재검토 제안</b>
• 2004.2~2004.11	<b>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 갈등 조정</b> - '천변저류지 2개소와 새로운 홍수조절용댐 건설' 을 결정 ('04.11.2)
• 2005.1.5~2.25	감사원 감사 (5.24 국회 예결위에 결과 보고) -홍수량산정 및 대안비교를 재검토하여 댐건설 여부 결정토록 권고
• 2005.5.23	<b>한탄강댐 관련업무 이관(지속위 → 국무조정실)</b> -댐 반대측의 지속위 조정결과 수용 거부 및 공동협의회 참여 거부
• 2005.8.24	「임진강홍수대책 특별위원회」 및 그 산하에 「검증·평가실무위원회」설치·운영 -특별위원회(22인) : 국무총리(위원장)등 정부(15인) 및 민간(7인)위원 -검증평가실무위원회(13인) : 기상, 수리·수문, 환경,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
• 2006.8.4	임진강홍수대책 대토론회 (지역주민, 지역추천전문가, 실무위원, 외부전문가 등 참석)
• 2006.8.22	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임진강유역홍수대책으로 <b>“홍수조절 전용댐 및 천변저류지” 건설안을 최종 결정</b>
• 2006.12.20	한탄강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고시 (건교부고시 제2006-551)
• 2007.2.28	<b>실시계획 고시 및 댐건설 공사 착수</b>



그림 2. 한탄강댐 조감도

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생겨났다.

연천, 포천 등 지역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댐의 안전성과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댐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하였고, 상류지역 철원주민들은 홍수시 상류지역 침수, 안개 피해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운동을 벌였다. 특히 철원지역은 군의회가 댐건설 반대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강원도는 지역주민과의 합의 없는 댐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반대를 입장으로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요청

하였다. 한편 299세대에 이르는 연천·포천 수물 예정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수물민종합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신속한 댐건설 여부 결정을 주장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공람,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의 견수렴 과정에서 댐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라지면서 댐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었다.

'01. 8월초 개최예정이던 주민설명회가 연천군을 제외한 포천군, 철원군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가 다시 열리고,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철원·연천·포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02.8.20)하면서 한탄강댐 건설반대 운동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03년 9월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추진위원회에서 한탄강댐건설의



그림 3. 주민설명회

타당성과 관련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12월에는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의 주도로 댐건설 예산삭감 서명운동이 벌어지더니, 실제로 12월말에는 '04년 예산중 136억원이 삭감되었다.

이와 같이 갈등현안에 정치인들이 주요 당사자 또는 관련자로 개입하여 댐건설의 추진 또는 반대 입장에 서므로써 매우 복잡한 갈등양상이 나타났다. 건교부 등 사업시행자는 수차례의 보완과 협의 끝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조건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댐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운동이 계속 확산되자, 사업추진을 일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03년 12월 19일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도민과의 대화에서 철원출신 도의원의 댐건설 백지화 요구에 대하여 “절차와 결과에 승복한다면 재검토 할 수 있다” 고 답

변하므로써 갈등상황은 대화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04년 1월 지속위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환경단체 및 찬반주민 등 네 당사자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정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동년 2월부터 갈등관리준비단을 구성하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갈등조정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조정과정을 진행할 '갈등조정 소위원회'와 '한탄강댐 문제조정을 위한 당사자회의'를 구성하였다. 동년 6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16회의 조정회의, 5회의 기술검토소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당사자 대표는 조정소위에게 한탄강댐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위임하고 조정소위는 조정회의 해체 후 1개월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그 후 조정소위는 그동안 당사자들이 제시한 대안과 전문가 기술자문을 기초로 동년 11월 2일 최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세 당사자를 제외한 댐 반대주민측은 중재안의 수용을 거부하였고 이로써 갈등은 재발되게 된다. 이어 반대주민측을 제외한 3자 동의에 의하여 조정 후 후속조치로서 공동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던 지속위의 운영소위는 합의에 의한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05년 5월 한탄강댐 갈등조정업무를 국무조정실로 넘기게 되었다.

한편 동년 5월 23일 감사원은 국회의 청구로 실

시된 '한탄강댐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추진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정함으로써 건교부 등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한탄강댐 반대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갈등조정업무를 인수받은 국무조정실은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검증·평가단을 두어 중립적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06년 8월 22일 임진강특위는 검증·평가단이 건의한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 안을 임진강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최종대안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약 7년여에 걸친 한탄강댐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사업 착수에 필요한 법적절차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4. 당시의 회고와 에피소드

##### 가. 전반적인 분위기

'99년 여름 임진강 유역에 세 번째 내린 대홍수로 인하여 추경예산(50억원)이 서둘러 반영되고 댐 설계용역의 착수('99.12.10)와 정부의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99.12.28)으로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이듬해 찾아온 영월댐 백지화 사태는 댐건설사업에 있어 최대의 위기를 몰고 왔다.

7~80년대 이데올로기 및 반정부운동을 주도하던 각종 시민단체들이 공산주의의 붕괴와 환경의

중요성이 사회전반에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고, 그 영향은 90년대 중반부터 각종 개발사업에서 급속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리우선언('92. 6. 14) 이후 모든 개발사업에 '지속가능한 개발'이 기본원칙이 되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적용('93. 12)되기 시작하면서 댐건설사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장흥댐(저수용량 191 백만m<sup>3</sup>)이 이시기에 유일하게 추진('96.2)되었고 동년에 시작된 영월댐사업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민, 환경단체 및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는 용수확보와 홍수조절기능보다는 생태 및 환경보전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므로써 백지화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위축된 분위기에서 한탄강댐사업을 추진하던 담당자들은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업무 등 주요한 사업추진에 있어 “만일 임진강유역의 항구적 홍수방지를 위해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정한 한탄강댐사업이 백지화 되는 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임을 유기하는 동시에 향후 수자원의 확보와 홍수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댐건설사업은 영원히 물건너 가는 것이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무장은 해당부처나 시행자는 물론 설계를 맡은 용역사(삼안), 시공사(대림산업) 모두 한 마음이었다.

이때 특기할 만한 일은 정부의 개발사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였다. '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선에서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은 대신 그들

에게 조직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므로써 이때 시민단체들은 우후죽순격으로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이어서 집권한 참여정부('03.2~'08.2)도 권위주의의 탈피와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정책기조로 시민단체 및 운동권 출신등의 인물을 청와대 비서실 및 각부 장관에 발탁하는 등 새로운 인사정책으로 국가의 대형 건설사업들(새만금 간척, 천성산터널, 사패산터널 사업 등)이 재검토의 과정을 걷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출신의 장관이 취임한 환경부처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환경단체들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환경단체는 시행부서보다도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 개발사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탄강댐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늘날 4대강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추진의지 및 지원체제를 비교할 때 그야말로 천양지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지역주민들

댐 건설로 인하여 가장 영향을 받는 주체는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일 것이다. 현실적인 보상의 한계와 새로운 삶의 터 정착까지의 불안은 물론 실향의 아픔과 자연공동체의 해체등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부인할 수 없다. 영월댐과 같이 중도에 백지화 된 경우도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주민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최대의 고객으로 선정하고 최대의 관심을 기울였다. 먼

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및 사업절차를 소상히 설명하였고,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깊은 보상과 이주대책, 주변지역 지원대책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므로써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탄강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구분되었다. 수 차례 홍수피해를 겪은 하류(파주, 문산)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시행을 원하는 반면 상류지역(철원) 주민들은 혜택보다는 피해만 입게 된다는 우려(3장 참조)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수몰지 및 저수지주변 주민(연천, 포천)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충분한 보상과 지역발전대책을 요구하며 조건부 찬성을 표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입장 차이는 주민설명회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특히 댐이 위치하는 연천군의 경우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며 설명회 개최에 협조한 반면 포천 및 철원군 주민들은 일단 반대 입장을 보인다음 태도를 정하겠다고 설명회를 보이콧하였다. 따라서 며칠후 포천군은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소규모 단위로 설명회를 열었고 철원군은 청소년 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지역의 반응이다. 한 지역은 댐사이트 인근의 연천군이 고 또 한 지역은 댐상류지역인 철원군으로서 두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결정 방식과 마인드 면에서 확연히 달랐다. 전자의 경우 주민들의 총의를 대

표기구인 수몰민종합대책위에서 결정하면서 모든 사업절차에 순응하였다. 사업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사업에 협조하되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요구하는 윈-윈전략을 기본으로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대응하였다. 이 전략은 영월댐 사례를 분석하여 내린 최선의 선택으로 매우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마인드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절차 및 갈등조정프로세스 등에 적극참여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그 결과 정당한 사업절차의 추진 및



그림 4. 전문가 토론회

열린 토론의 장을 조성하는데 누구보다 큰 기여를 하였고 정부의 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사업시행자를 신뢰하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적극 요구하고 건의하는 등 성숙한 주민의식과 합리적인 마인드에 지금도 존경심을 금할 수 없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혜택은 없고 피해만 본다는 시각이었다. 따라서 댐건설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설

명에 대하여 수궁하려고 하지 않았다. 철원군댐 건설백지화 대책위원회(군의회 의장이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부정적으로 몰고 갔다. 또한 지역언론, 지역정치인(군수, 국회의원 등), 강원도 및 정부 해당부처에 압력을 넣으며 댐건설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철원지역의 강경한 반대여론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도 지역의 반대정서가 가라 앉을때까지 기본계획고시를 유보하게 되었고,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철원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작업에 전력투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댐건설을 원하지 않는 반대측지도자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체설명회 자리를 거부하였고 철원군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지역 언론도 함께 댐건설반대의 당위성만 연일 보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방법은 제한적이였다.

공여지책으로 철원군내 모든 지인들(혈연, 학연, 지연 등)을 조사하여 이분들을 통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개인별 서신발송, 지역신문에 광고 및 홍보전단지 살포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댐건설 이해 쪽으로 이반될 것을 원치 않는 반대측의 압력과, 우편물회수 및 지역신문 불매운동 등의 방해작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댐건설 반대정서 순화노력도 벽에 부딪히고 만다. 이로써 한탄강댐 사업은 다시 표류하게 되고 대통령의 중재로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그림 5. 갈등조정 당사자회의 대표단

다. 지속위의 갈등조정프로세스

한탄강댐을 둘러싼 참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프로세스가 지속위 주관으로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갈등조정을 위하여 갈등관리준비단을 거쳐 갈등조정소위원회(4인의 조정위원)와 당사자회의(찬반 주민 각4인, 정부·환경단체 각3인, 조정위원 4명 등 총18인)가 구성되었다(3장 참조). 당사자회의는 사전합의한 그라운드룰(회의운영원칙)에 따라 환경정책평가연수원 회의실에서 총 21회가 열렸다.

회의는 매주 1회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저녁 늦게 까지 마라톤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열띤 공방으로 늘 긴장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일회성 토론과는 달리 7개의 핵심쟁점(절차의 타당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환경영향, 안정성, 주민영향, 대안모색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리적 공방이 이루어지므로 원론적인 수준의 비판과 답변은 용납되지 않았다.

각 주체의 대표들은 같은 입장에 있는 당사자끼리 심정적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므로 실재는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1:1 정면승부를 앞둔 선수처럼 언제나 강경하고 전투적이었다. 특히 환경단체대표단에는 댐과 경제 및 환경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허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답변 자료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국내 최초로 시도된 정부의 갈등관리프로세스는 반대측주민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실패하였지만,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합의 즉 제3자의 중재를 통한 갈등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향후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당사자의 책임과 법적 구속력을 보완한다면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발생시 국론분열을 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줄이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고 사료된다.

라. 관련 환경단체

한탄강댐 사업에 관련된 환경단체는 환경운동연합, 한탄강네트워크 및 연천포럼 등 3개 단체가 있다. 이들은 입장과 역할은 서로 달라도 필요시 서로 연대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댐건설을 적극 반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단위의 환경단체로서 정부의 댐건설정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탄강댐에 대해서도 친환경적 개발방안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그 후 갈등조정프로세스에 환경단체 대표로 참가하여 역할을 하였다.

한탄강네트워크는 포천·연천지역의 환경운동단체로서 조사 때부터 댐건설의 타당성과 환경피해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중앙의 환경운동 연합과는 정책적으로 공조 및 상호지원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내에서의 반대운동은 주로 한탄강네트워크가 담당하면서 설명회, 토론회 등 각종 회의에 관여하고 각종 반대여론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단체의 대표자는 운동권 출신으로서 고향인 수물지에 살면서, 지역 내 환경감시 활동을 하다가 한탄강댐 계획 발표 이후 완전히 댐건설 반대운동으로 전향한 인사로서, 각종 시위와 농성을 주도하였다. 처음에는 연천·포천지역에서 반대운동을 리드하였으나, 그 뒤 호응을 얻지 못하자 주로 철원지역 반대주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시위를 통한 인지도를 넓혀 가면서 정치적 입지도 키워나가더니 '04.4월 총선에 지역구(포천·연천)의원에 출마하여 여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국회차원에서 예산삭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등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탄강댐 관련부처와 담당자들을 압박하였다.

특기할 것은 영월댐 백지화 이후 환경단체들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하여 사업초기부터 엄격한 사업절차의 이행과 신뢰적 합의 도출이라는 차원에서 주요한 당사자로서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였

다. 그러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정책적 이견과 타협을 모르는 일방적 주장의 벽에 막혀, 국가적인 문제의 공유와 합리적 대안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기울인 열린 대화와 협력들이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마. 잊을 수 없는 기억들

7년여 동안 한탄강댐사업의 일선에서 수많은 고비와 사연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골라 아쉬움과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남기고 싶다.

첫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종일관 반대측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주고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전면 재검토 판정까지 받은 부분은 임진강 유역내 홍수량 및 조절효과였다.

문제는 댐유역의 홍수량 및 조절효과가 임진강 전체유역에 비하여 과대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으로서, 그게 사실이라면 댐계획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었다. 변명의 여지로는 유역의2/3가 북한 지역으로 수문량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문자료를 구할 수 없고, 홍수량 산정방식도 여러 전문가의 방법론과 매개변수의 적용에 따라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설계조건에 대한 논란은 결국 임진강 특위에서 객관적 전문가의 검증·평가결과 기본 홍수량(문산천 합류부, 댐지점)은 과다 산정되지 않았으며 조절효과만 다소(6%) 감소된 양으로 밝혀졌다.

이 홍수량 문제는 임진강 특위의 재검토 결과 검증이 되어 거의 원안대로 수용되었지만, 그동안

반대측 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으로 담당자들이 겪은 불신과 수모 및 감사결과에 따른 문책등은 두고두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둘째로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득 과정에서 보여준 국방부 및 경찰관서의 협조에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댐 사이트 선정시 최적대안 지점이 전략상 도저히 이전이 불가한 대규모 사격장과 훈련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국가적 차원에서 댐과 훈련장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의해 줌으로써 한탄강댐 건설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또한 경찰관서는 주민과 환경단체 접촉시 질서유지와 신변안전보호는 물론이고, 지역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반대측 지역에 외면당하여 정보의 고립 상황에 있을 때, 언론을 열어주고 차단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반대측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제의 맹점인 지역이기주의 안에서 국책사업 시행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운신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분들이다.

셋째는 댐사이트 주변 수몰주민들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조와 인내심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사업초기부터 무조건 반대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경청하고 제도적 절차 안에서 정당한 권익과 합리적 요구를 내놓았다. 3개시군 중 유일하게 주민설명회에 최초로 협조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비마다 토론과 대화



그림 6. 제5차 임진강 특별위원회

의 장이 깨지지 않도록, 반대측의 이유 없는 방해에 맞서 주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하였다.

다시 한번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과 기나긴 시간 인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댐건설로 인하여 이분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기원해 본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로서 한탄강댐 갈등이 합리적으로 종결되도록 고위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신 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싶다. 이분은 국민의 정부시절 시민단체간부출신으로 환경부 장관에 취임하여 논란 속에 지연되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재가하였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총리로서 갈등조정 실패와 감사원의 전면 재검토로 표류하던 한탄강댐사업을 넘겨받아, 임진강 홍수방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검증·평가를 통하여 최종대안을 성사시키므로써 갈등을 종식시킨 일등공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고위 공직자로서 소신과 용기를 가진 분이며 공직자의 귀감으로서 한탄강댐 하면 잊지 않고 생각나는 분이다.

### 5. 나아가며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한탄강댐이 착공된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 기억너머로 흘러버리기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기도 마침 대담회에서 만들어준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속에 담아 둔 뒷얘기들을 털어놓게 되었다.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뼈를 깎는 인내와 거룩한 희생이 있듯이, 한탄강댐도 7년여의 긴 시련과 고통을 넘어 해산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 사업의 일선 책임자로서, 착공까지의 전 과정을 겪고 지켜 본 사람으로서, 자손 귀한 집에 태어난 옥동자처럼 이 댐에 대한 애정 또한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착공 후 계획대로 추진되어 조감도의 그림이 점

점 실제모습으로 변해가는 한탄강댐 소식을 듣노라면 흐뭇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모쪼록 한탄강 댐이 멋지게 준공되는 날, 임진강유역의 항구적인 홍수대책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공과정과 운영과정에서도 한탄강댐의 사명과 역할이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끝으로 지나간 일을 회고하면서 아직은 진행중인 사업이고 관련자들도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웠다. 가능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감정과 주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쓰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글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청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자료

1. 한국수자원공사 (2006), 갈등관리방안 연구보고서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한탄강댐 갈등조정과정 분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3. 박진, 박수선 (2007), 갈등조정 그 소통의 미학, 굿인포메이션
4.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실무위원회(2006),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보고서

